

ISSUE & FOCUS

Newsletter 2018-5

남북정상회담에서 희미해진 ‘북핵 폐기’의 과녁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1. 들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7일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 자체만으로도 세계의 이목을 받기에 충분한 이벤트였다. 프레스센터로 달려온 대내외 기자들의 규모가 3,000여 명이었던 사실 이 이를 증명한다. 세인들은 이번 회담을 김정은의 극적 반전 드라마를 여지없이 보여준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불신(不信)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에 거침이 없었다.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됐고 그 효과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거의 빈사(瀕死)상태까지 이르게 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는 이 모든 것을 반전의 계기로 만드는 블랙홀로 작용했다. 그의 신년사 핵심은 ‘핵 있는 상태에서의 민족공조(또는 대화와 협력)’이다.

이 신년사로 북핵 위협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고 민족공조가 전면에 부상됐다. 이는 ‘신의 한수’였다. 한국이 북한의 흑기사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한국의 암묵적 협력으로 이루어낸 반전의 합작품이다. 암묵적 협력의 징후는 김정은 신년사의 술어와 문장들이 남북고위급회담(1.9) 공동발표문에 재현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2018년 북한신년사의 ‘핵 있는 상태에서의 민족공조(또는 대화와 협력)’ 기조는 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4.21)의 ‘국가 핵무력 완성’과 ‘한반도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로 전승되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직전의 전원회의 결정은 ‘북핵 방향성’을 가름할 수 있는 발표였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한국 언론매체는 ‘북한의 (사실상)핵 보유국 선언’에 대한 보도는 외면했다. 대신에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중지, 실험장 폐기와 관련된 보도에 집중함으로써 북핵 정보를 왜곡하는데 일조했다. 그리고 북한은 ‘판문점 선언’(4.27)을 통해 북핵 폐기의 문제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표현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신년사 - 전원회의 결정서 - 판문점 선언의 일관된 기조는 ‘핵 있는 상태’를 상수로 두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2. ‘판문점 선언문’의 내용과 평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회담 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을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문’은 3개 조(條) 13개 항(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의 내용이, 제2조는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와 전쟁위험의 해소’의 내용이, 제3조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의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보여준 모습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속의의 모습보다는 이벤트에 치중한 모습이 자주 연출되면서 본말전도(本末顛倒)의 현상을 보여주었다. 선언문에 화려한 수식어와 희망적 단어가 다수 배치되면서 ‘북핵 폐기’라는 본래의 목적은 뒤로 밀리고 환상적 기대치만 높인 것이 이를 반증한다. 정상회담에서는 ‘보여주기 식’ 이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핵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 문제이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매우 이성적 판단으로 접근해야 했다.

다음, ‘북핵 폐기’와 관련된 내용이 기대보다 부실하다. 북핵 폐기가 핵심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분량은 전체 합의내용의 1/10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미북정상회담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의 의지를 명확히 했어야 했다. ‘선언문 3조 ④항’에 북핵문제가 명기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이다. 이 조항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으로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 내용으로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의미한다. 반면 선언문의 ‘핵 없는 한반도’는 비핵지대화의 다른 표현이며, 북한의 비핵지대화는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북한이 그동안 줄곧 사용해 왔던 내용이다. 따라서 선언문의 ‘완전한 비핵화’(CVID)와 ‘비핵지대화’는 서로 상충되는 용어로 향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물론 남북대화에서 핵문제가 거론되었다는 점은 그나마 성과라면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문’은 ‘북핵 폐기’가 실현되어야 진척될 수 있는 ‘선물 바구니’를 미리 약속했다. 민족공조에 따라 ‘이미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동번영이라는 명분으로 2007년 10·4선언의 부활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사실 남북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많은 합의를 했지만, 합의가 중단된 원인은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한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 때문이었다. 이런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남북합의를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향후 건전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완성은 작게는 100조, 많게는 270조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수역’에 합의했다. 그동안 적대행위의 주체는 북한이었고 한국은 늘 피해자였다. 그러나 북한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킬 실질적 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일방적 포기가 명기됐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NLL의 평화수역으로 전환 문제는 자칫 해상경계선의 포기 내지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방어에도 치명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정전상태를 평화체제의 수립’으로 전환되려면 전제조건인 ‘북핵 폐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6월초로 예정된 미북정상회담은 ‘북핵 폐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가는 도정(道程)이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은 ‘북핵 폐기’에 집중해야 한다. ‘북핵 폐기’의 절차가 마무리되기 이전까지는 어떤 선물도 북한에 제공되지 않아야 하며, 회담이 안보지형의 변화를 초래하는 결과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가는 인색할 수밖에 없다.

3. 향후 과제

김정은의 신년사와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의 기조는 ‘핵 있는 상태에서의 민족공조’라는 점이다. 이런 기조의 배경은 국가 핵무력(무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북핵 폐기’가 핵심과제였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은 북핵 폐기의 과녁을 더 희미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핵 없는 상태’를 가정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환상에 매달리게 했다. 북한은 핵무력을 앞세워 연방제통일의 길을 찾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활동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점은 매우 염려된다. 최근 조총련계의 조선신보가 정상회담을 연방제통일의 기점이라고 규정한 점은 북한의 저의를 엿볼 수 있는 보도이다.

북핵 문제는 한국안보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2016. 1.6) 이후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에 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설마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겠는가 하는 안이한 생각이 팽배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오해가 고착된 지는 오래됐다. 이는 한국이 물질적 자강(自強)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강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핵과 관련해서는 ‘핵 있는 상태에서의 대화와 협력(민족공조)’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유화정책이 옳은가 압박정책이 옳은가와 같은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확실한 과녁을 설정한 전략이어야 한다. 바로 ‘선(先)북핵 폐기’ ‘후(後) 관계개선’에 과녁이 맞추어진 안보전략의 패러다임이어야 한다. ‘북핵 폐기’라는 과녁 설정에서 군사안보전략의 핵심은 자강과 동맹(同盟), 균세(均勢)다. ‘핵은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정리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 북핵에 대비한 최소한의 물질적 자강능력 구비가 그것이다. 또한 북핵의 진의를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 국력을 결집하는 것은 정신적 자강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다. 감성적 이벤트는 국력을 약화시키고 정신적 자강능력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또한 동맹은 자강능력을 보완해 주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제고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평화를 빙자해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고 붕괴시키는 것은 자해행위이자 자강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역사적 교훈은 자강에 기반 한 동맹이고, 자강과 동맹에 기반한 균세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